

# “복지재정 보조사업 조정 지방재정 부담 완화해야”

### 전북연구원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비부담 지속 늘어 보편적 복지문제 대한 국고보조사업, 전액 국비부담으로 전환해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국가 계획하에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을 재설계해 지방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북도의 복지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2년 기준 복지분야의 보조사업 비율은 88.85%이고 자체사업은 9.41%로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의 재정자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의 확대에 대응 지방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재정적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2022년 기준 복지재정 총액에서 시도비의 부담액은 전체 자체재원의 34.1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책임인 이종섭 사회문화연구부장 “무엇보다도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대부분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향후에도 관련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도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의 재정구조를 지역의 재정 상황에 맞게 재설계해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높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전북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를 적용사업 확대, △차등보조를 지원체계 세분화,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일관적 원칙 설정, △유사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제 전환, △복지분야 재정배분 기준 전북특례 시범적용 등 5가지 전북도 정책방향을 전북연구원은 제안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를 적용사업 확대, △차등보조를 지원체계 세분화,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일관적 원칙 설정, △유사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제 전환, △복지분야 재정배분 기준 전북특례 시범적용 등 5가지 전북도 정책방향을 전북연구원은 제안했다.

먼저,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동일보조를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사회복지분야 차등보조를 적용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총 274 사업의 6.5%에 불과해 차등보조를 적용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차등보조를 지원체계도 세분화하여 지역별 재정격차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에 가장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기초연금은 차등보조기준인 재정자립도의 기준도 현행 80%미만을 최소기준에서 다수 지

자체가 포함된 60%까지 세분화하고 국고보조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특별한 원칙이 없이 설정된 현행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지원체계를 복지사업의 목적과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적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 체계는 ‘형평성’과 ‘효율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역에 겪고 있는 보편적 문제에 대한 복지사업 만큼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국고보조사업 재정배분 기준을 적용해 재정부담이 큰 5대 국고보조사업(기초연금, 보육료지원,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이동수당)을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면 전북도의 경우 최대 2,400억원의 세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운용 경직성 해소를 위해 유사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유사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특정사업의 불용액 발생 시 유사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의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두번째 옆 오른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화이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환전 가맹점 3년새 16배 ↑”

### 2019년 9000곳에서 지난해 12만9000곳으로 증가 지난해 환전 많았던 업종으로 소매업·음식점업 숙박업 제외 모든 업종서 환전액 증위급 낮아져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가맹점이 2019년 9,000곳에서 2022년 12만9,000곳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사천)이 한국조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간 1회 이상 환전한 가맹점 수가 2019년 8,000곳, 2020년 7만2,000곳, 2021년 12만8,000곳, 2022년 12만9,000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2년 환전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소매업으로 140만 6천건을 환전에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음식점업(32만4,000건), 개인서비스업(16만9,000건), 보건업(8만 3,000건), 제조업(5만2,000건), 교육서비스업(4만 5,000건), 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1만 1,000건), 숙박업(7,000건) 순으로 많은 환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맹점별 환전액 증위급이 2019년보다 낮아지며 상품권이 비교적 고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매업(678만원~610만원), 음식점업(250만원~165만원), 개인서비스업(264만원~163만원), 보건업(1,079만원~674만원) 등에서 2022년 환전액 증위급이 낮아졌다.

한 의원은 “환전 가맹점이 증가하고 환전액 증위급이 낮아진 것은 상품권이 얼마나 고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면서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복원해 영세 지역업자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44건 안건 심의·의결

###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익산시의회(의장 최중호)는 지난 27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을 포함한 총 4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지방의 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유재구 의원)과 최근 정부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 전액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증액 편성할 것을 건의하는 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양정민 의원)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재현 의원은 권역별 이동노동차 쉼터 설치를 촉구했으며, 이종선 의원은 ‘청년공유주방’에 대한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북부권 도시계획을 제안했다.

이날 실시된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강경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선관위, 민주주의 어울림 선거교실 실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로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실 및 선거홍보관에서 ‘민주주의 어울림 선거교실(이하 어울림교실)’을 가졌다.

지난달 15일을 시작으로 이달 27일까지 전주 및 완주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총5회 실시한 이번 어울림교실은 게이미피케이션 형식을 활용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김재훈 기자

# 여야,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직회부 두고 공방

여야는 지난 27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한 바 있다.

한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 압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한 만큼 정

부여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11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법사위

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회부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도 예상된다. /뉴스1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자** → **지역자치** → **농업인** → **농축산물 공급** → **지역자치** → **기부** → **기부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담겨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점: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협

\*기부 한도액 12만원 연간 5002명 이내(2022년 기부 불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